

## 尹, 소환 조사 또 불응... “법치국가 무시한 처사”

공수처 2차 소환통보에도 불출석  
지속 출석 거부에 지역민들 분통  
“특수 지위 이용 수사 방해·지연”  
“중대범죄...구속 등 신속 조치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서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도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1차 소환 통보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2차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출석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자인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이 된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간 이후로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차 출석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까지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며 “수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 내란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지역민들도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시민 조상현(30)씨는 “내란 범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만큼,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특혜”라며 “사실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을 거부한 것도 본인을 임명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 시절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이었다고 말문을 연 영광군민 이모(60)씨는 “당시 밤마다 불이 새어나갈까 이불로 창문을 막아놓고 살았던 엄혹함이 기억난다. 호남인에게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며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간 전두환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시대와 시민의식이 달라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조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특수지위를 활용할 수사를 방해·지연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성탄 미사 성탄절인 25일 광주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린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신도들이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65세 이상 20% 돌파... 사상 첫 ‘초고령 사회’

1024만여명... 전남 27.18% ‘최고’  
고령사회 진입후 6년 만...가속화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83%, 여성 22.15%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p)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

구(2604만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높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6.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태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